

“노조탄압 규탄” 광주 노동계 총파업 대열 합류

주야 4시간씩 파업...1200여명 행진
尹 정부에 맞설것...하반기 총궐기
기야차 2개조 참여 생산 차질 우려

광주 노동계가 도심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민주노총 전국동시대발 총파업 및 총력투쟁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주야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돌입, 노조탄압 저지 및 노동권 쟁취를 촉구했다.

31일 오후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주야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노조탄압 규탄을 위한 총력투쟁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조합원 1200여명은 분행사 시작에 앞서 기야차 광주공장 남문에서 광주시청을 거쳐 국민의힘 광주시당까지 2.6km 이르는 거리를 행진했다.

이들은 행진 중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개악 노조파괴 분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호루라기를 불며 “노조·민생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거듭 외쳤다.

오후 3시30분께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 도달한 노조는 3차로 도로를 점거, 각 산하 지부의 투쟁사를 시작으로 본대회를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강원도서 노동 투쟁 과정에서 분신한 양희동 조합원과 광양서 농성 중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머리를 다친 한국노총 간부를 언급하며 정부의 노조탄압을 규탄했다.

양현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오

늘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던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경찰이 휘두른 파이프에 맞아 실려 내려왔다. 또,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 지회장이 현행법으로 체포됐다”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민주인사들을 잡아가는 게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다. 우리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동지들을 구속시켰다. 이런 정권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설파했다.

양 지부장은 이어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6월 최저임금 인상 투쟁, 7월 전조합이 참여하는 총파업투쟁을 결의했다. 연대의 힘으로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맹종안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은 “양희동 열사가 분신한 지 한 달이 됐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상황이다”며 “노동자가 죽어나가야 노동자 목소리를 듣고, 노동자가 분신을 해야만 투쟁 연대 정신이 형성되는걸 보면 안타깝다. 이제 힘있는 노조를 만들어 양 열사가 이야기했던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도 “윤석열 정권은 건국 운운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화물 노동자들은 안전운행제가 폐지돼서 또다시 죽음의 운전을 하고 있다. 전기, 가스 등 민영화 추진 시도의 여파로 전기료와 가스비가 또 인상됐다. 노동과 민생이 파탄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대회를 통해 △주 69시간제 등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윤석열 정부 규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3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시민단체 마녀사냥을 규탄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란봉투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후 조합원들은 윤 대통령의 당선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해당 대회를 두고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됐으나 위험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신고된 집회 시간을 여기거나 심각한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경우 강

제 해산시킨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윤희근 경찰정장은 ‘캡사이신’ 분사까지 경고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경찰은 이날 1개 중대 80~100여명의 경찰을 투입, 교통 통제 위주로 대응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노조 일부가 서울 집회 참여를 위해 상경해 기존 집회와 비슷한 수준의 규모로 대회가 진행될 것으

로 보인다”며 “강경 대응하라는 공문 등은 내려온 바 없으며, 광주시는 교통 통제·정리에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분파업으로 인해 기야차 광주공장 등 일부 사업체의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야차 광주공장은 하루동안 2개 조가 파업에 참여, 조기 퇴근해 근무시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5·18재단, 갈등 봉합 위한 시민 공론장 제안

공법단체 vs 시민사회 충돌 장기화
재단 “시민 의견 다양하게 수렴해
새로운 5·18공동체 방향 정립할 것”

5·18기념재단(재단)이 우려되는 갈등 분위기를 해소하고 새로운 공동체 비전을 제시하고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제시했다.

그간 두 5·18공법단체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왔으나 해결되지 않자 이

른바 ‘컨트론타워’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재단은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 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월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소모적이고 적대적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5·18정신의 미래 지향적 기념과 계승을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다”며 “5·18의 ‘진실과 책임’, ‘주체’에 대한 시민 참여 공론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 측으로부터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받은 재단은 “어느 한 쪽 편을 지지하는 것은 갈등 현안을 풀어내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5·18정신이 무엇인지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해 양 단체에게 전달하며 갈등을 봉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또한 “현재 갈등의 원인은 5·18 해결 5원칙(△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배·보상 △기념사업)을 실현

하는 과정에서 그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5원칙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은 “5·18과 관련해 수많은 기관과 단체가 있지만 재단이 각각의 영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들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재단은 임시로 TF를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론장 형성을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토론회, 집담회, 학술행사, 여론조사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며

오월운동의 원칙을 세울 담론 생산과 방향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19일 5·18 공법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모자회)가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특전사회)를 초청하며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하자 시민사회가 ‘선부른 화해’라며 비판했다. 같은달 21일 190여개의 시민단체가 ‘오월정신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하며 공동선언식과 합동참배 등을 저지하기 위해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는 등 내홍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김혜인 기자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